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다주택자 양도세 일시적 2주택자 숨통 턱이었다…기간 확대와 전입요건 삭제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규정이 완화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도 1년 유예됐다.

정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예고대로 1년간 유예됐다.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2년 이상 보유 주택을 양도한 경우다. 유예 기간 내에는 기본세율 및 장특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보유 기간 규정이 완화됐다. 기존에는 다주택자가 1주택만 빼고 모든 주택을 판 시점부터 2년간 1주택을 보유했을 경우 양도세 비과세 적용대상에 포함했었는데 이 규정이 삭제된 것이다.

일시적 2주택자가 다시 1주택자로 돌아가기 위해 집을 팔아야 하는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됐다. 중요한 점은 전입요건도 같이 완화됐다는 것이다. 기존 규정에서는 집을 팔고 세대원 전원이 새 집으로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해야 인정해줬지만, 앞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게 됐다.

국세청 종합소득세 간편신고… 2년 사이 방문납세자 48만명 감소

국세청이 종합소득세 비대면 간편신고(모두채움) 시행 후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하는 납세자가 수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2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세무서 방문신고 인원이 2020년 110만명에서 62만명으로 44%(48만명)이 줄었다고 밝혔다.

특히 방문 신고 대부분을 차지하는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 및 근로·연금·기타소득자의 방문이 38만명(41%)이 나 줄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전자신고를 통해 편리하게 세금 신고할 수 있도록 각종 서비스를 확대해왔다.

홈택스에서 신고서에 써야할 내용을 모두 채워주는 모두채움 대상자를 2021년 212만명에서 올해 497만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홈택스에서 복잡하게 신고항목을 찾을 필요없이 홈택

스 주 화면에서 신고를 마칠 수 있는 원클릭 신고 및 신고 내비게이션 등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했다.

모두채움 대상자가 전화 한 통으로 신고를 마칠 수 있는 ARS전화 신고 서비스도 시행했다.

이밖에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춘 신고 안내문 개선, 인적용역 소득자를 위한 간편환급 서비스 개발, 전자신고 안내샷폼 영상 54편 공개 등 다양한 개선이 이뤄졌다.

이는 국세청이 그간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편의를 확대한 결과로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납세자 수는 2012년 190만명에서 지난해 491만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모두채움·간편신고 등 서비스를 늘리고, 홈택스·손택스를 사용자 친화적으로 만드는 등 신고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1주택자 보유세 2020년 수준 인하… 다주택자 종부세 감세도 검토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2020년 수준으로 줄어든 전망이다.

올 상반기 종료예정이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는 연말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3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긴급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을 가격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한다는 방침이다.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 재산세의 경우 2022년 대신 2021년 공시가격 정도만 적용해도 특례세율에 따라 세금 부담이 2020년 수준으로 낮아진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은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하되 올해 100%로 예정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내려서 조정할 계획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가격의 일정비율로 깎아주는 공제이기 때문에 고가주택일수록 이익을 보는 공제다.

1주택자 그리고 일정 주택가격 선으로 비율공제 인하를 제한짓지 않으면 고가·다주택자 감세폭이 월등히 커진다.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확대해 고가·다주택자까지 감세해주는 방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